

건설동향브리핑

제399호 (2013. 2. 18)

■ 경제 동향

- 2012년 해외 건설 수주 649억 달러 달성

■ 정책 · 경영

- 교통 인프라 정책이 국가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 주택 거래 정상화를 위한 두 가지 접근

■ 정보 마당

- 워크아웃 · 법정관리 업체, 공공공사 수주 활로 터줘야

■ 연구원 소식

- 건설 논단 : 새 정부, 선도적인 산업 정책 필요해

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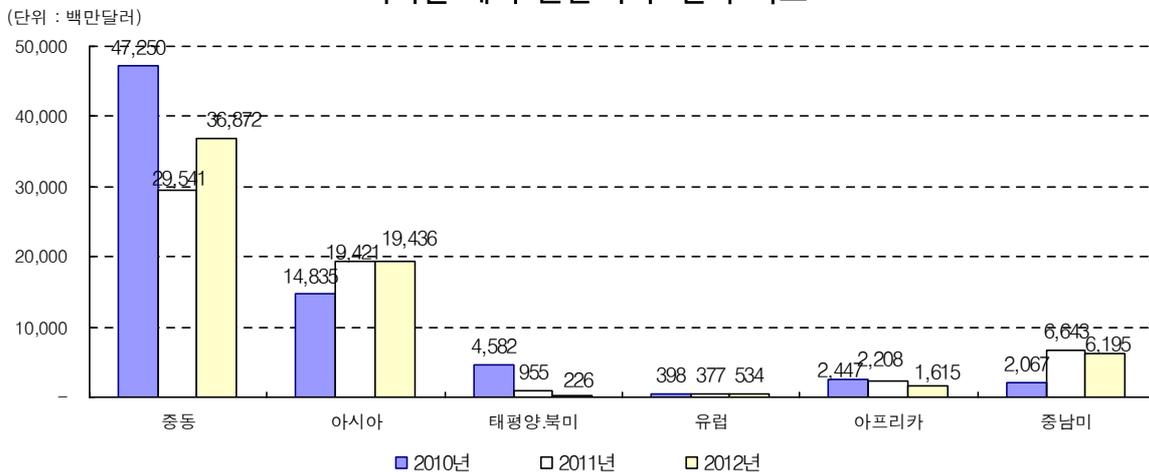
2012년 해외 건설 수주 649억 달러 달성

- 중동 수주 회복 영향으로 토목과 건축 등 증가, 2013년에는 700억~750억 달러 예상 -

■ 중동 지역 수주 회복에 힘입어 649억 달러 달성

- 2012년 해외 건설 수주는 유럽 재정 위기 등의 영향으로 당초 목표였던 700억 달러에 다소 미치지 못했으나, 2011년보다 9.7% 증가한 649억 달러를 달성함.
 - 2012년에 기록한 649억 달러는 186억 달러 규모의 UAE 원전을 포함하여 716억 달러를 기록했던 2010년을 제외하면 역대 최고의 수준임.
 - 2008년 476억 달러→2009년 491억 달러→2010년 716억 달러(UAE 원전 수주 제외시 530억 달러)→2011년 591억 달러→2012년 649억 달러를 각각 달성해 수주 확대 기조 유지
- 지역별 분석 결과, 비중이 높은 중동 지역의 수주가 현저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중동 지역에서는 민주화 시위에 따른 내정 불안으로 실적이 하락했던 2011년과 달리 2012년에는 안정을 되찾아 전년 대비 24.8% 증가한 369억 달러를 달성함. UAE 원전 수주로 지난 2010년에 472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준임.
 - 아시아 지역도 전년 대비 0.1% 증가한 194억 달러로 역대 최대액을 소폭 경신함.
 - 다만, 태평양·북미, 아프리카 지역은 각각 전년 대비 76.3%, 26.9% 감소함.
 - 중남미 지역에서도 전년보다 6.8% 감소한 62억 달러를 기록함.
 - 유럽 지역의 경우 전년 대비 41.6% 증가했으나, 금액은 5억 달러로 다소 미미한 수준임.

<지역별 해외 건설 수주 실적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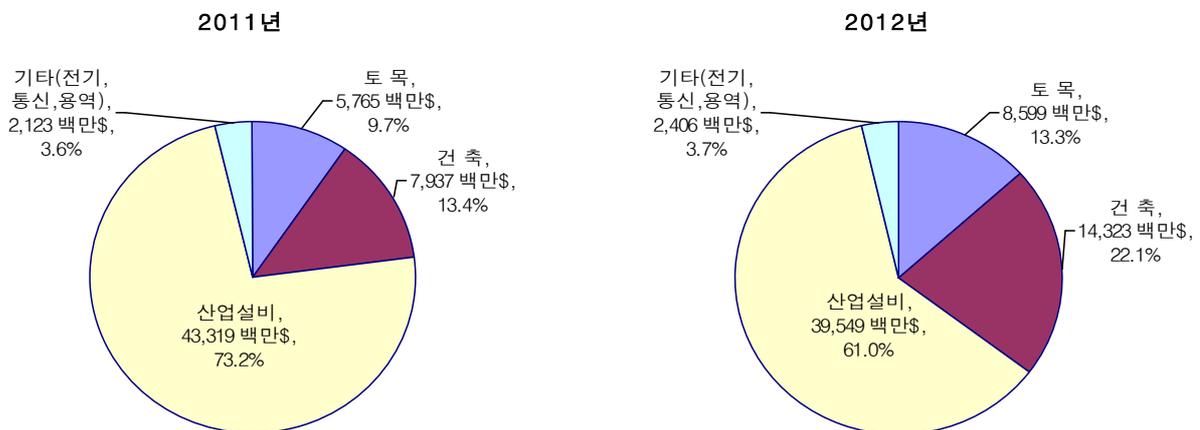


자료 : 해외건설협회

■ 산업 설비 비중 다소 축소, 건축과 토목 공종 비중은 증대

- 공종별 분석 결과, 산업 설비 수주가 2010년보다 8.7% 감소한 395억 달러를 기록, 산업 설비의 비중이 61.0%로 다소 낮아짐. 반면, 건축과 토목 수주의 비중은 각각 22.1%, 13.3%를 기록해 전년보다 증가함.
- 특히, 건축 수주는 77.9억 달러 규모의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 프로젝트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80.5% 증가한 143억 달러를 기록하여 역대 최대액을 달성

<공종별 해외 수주 실적 비교>



자료 : 해외건설협회

■ 2013년 해외 수주, 700억~750억 달러 달성 예상

- 2013년에는 해외 건설시장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중동과 아시아 등에서 수주 확대 기조를 이어가 700억~750억 달러 수준의 수주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됨*.
- Global Insight는 세계 건설시장이 매출액 기준으로 2012년 8,000억 달러, 2013년 8,600억 달러, 2014년 9,400억 달러를 각각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
- 특히, 중동 지역에서 중장기 계획에 따른 석유 화학 관련 프로젝트 및 전후 복구 사업 등 인프라 발주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 국내 업체들의 해외 수주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아시아를 비롯한 남미 신흥 지역의 경제 성장으로 설비 및 인프라 투자가 증가해 신시장에서의 수주 기회 확대도 지속될 전망이다.

박철한(연구원 · igata99@cerik.re.kr)

* 2012년 12월 25일자 국토해양부 보도자료 인용

교통 인프라 정책이 국가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 교통 인프라 경시가 미국의 국가 경쟁력 하락 부추겨 -

■ 보고서* 제출의 배경

- BIS재단은 미국의 주도권 회복을 위해 정부와 산업계에 각종 권고안을 제출하는 비영리 재단법인 연구기관임.
 - 2012년 6월, BIS재단은 미국 정부에 교통 인프라 투자 확대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권고
- 2010년 기준, 교통 인프라의 부실로 미국인들이 연간 지불하는 경제적 대가
 - 교통 혼잡으로 인해 미국인들은 연간 1,010억 달러(약 111조원)를 낭비하고 있음.
 - 현 상태를 방치할 경우 교통 인프라의 부실로 경제 성장률이 연간 0.2%씩 하락하여 2020년에는 1.2%까지 하락하게 될 것으로 추정될 만큼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음.
- 미국과 OECD 국가들의 교통 인프라 투자 비중 비교
 - 미 연방 예산에서 교통 인프라 투자의 비중은 GDP 대비 1.6%에 불과한 반면, 의료 복지에 3.6%, 사회 안전망에 4.8%, 국방에 4.7%를 투자하는 등 상대적으로 열악함을 지적
 - GDP 대비 투자 비중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혹은 끝에서 2번째로, 1970년대 이후 OECD 평균치의 52.7%에 불과한 사실을 지적
 - 현 추세가 지속된다면 미국의 교통 인프라 경쟁력은 2011년 현재 세계 주요국 중 24위에서 2015년에는 35위까지 추락하게 될 것으로 예측

■ 교통 인프라 정책이 부실해진 원인

- 1970년대 이후 교통 인프라 정책을 총괄하는 연방 정부 차원의 사령탑 부재
 - 고속도로와 철도 분야만 해도 7개 위원회로 분산될 만큼 사령탑 부재 심각
- 2009년 오바마 정부가 약 1,000억 달러(약 110조원)을 경기 부양 대책의 일환으로 투자했지만 2년짜리 단발성 1회 행사로 끝났음을 지적
 - 국가 교통 인프라 종합 대책보다 일자리 창출에만 우선 순위를 두었기 때문으로 해석

* Federal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Policy, Bernard & Irene Schwartz Foundation(BISF), 2012.6

■ 교통 인프라에 대한 새로운 추세 예측

- 오바마 대통령은 물론 민주·공화 양당 모두가 새로운 인프라은행의 설립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실패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
 - 인프라은행은 정부 재정을 5~10% 선 투입한 후 10~20배에 달하는 민간 자본을 유치하는 것이 기본 골자임(예 : 공적 자금 100억 달러에 민자 1,000억~2,000억 달러 유치).
 - 당장에 필요한 자금 확보는 가능하지만 실패할 경우, 국고 손실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다급한 미국으로서는 차선책이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
- 주정부는 부족한 재정의 해결책으로 아래 두 가지를 선호하고 실행에 옮긴 경우도 발생
 - 공공과 민간 협력 방식인 3P(Public-Private-Partnership)을 확대 적용
 - 무료 통행료를 유료화로 전환시키는 방식

■ 미국인들의 교통 인프라에 대한 인식과 연방 정부의 선택

- 2011년 미국의 록펠러재단이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여론 조사 결과
 - 80%가 미국이 세계 최강국으로 남기 위해서는 교통 인프라의 확충이 필요함을 절대 공감
 - 미국민 3명 중 2명은 교통 인프라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전적인 동의를 하는 반면, 71%가 세금 인상에는 반대함. 64%는 기존 무료 시설을 유료화시키는 것도 반대
- 연방 정부가 선택 가능한 대안으로 4가지 안과 영국식 긴축 예산 정책을 권고함.
 - 예산 확충(제1안), 유류세 증액(제2안), 추가 재원 발굴(제3안), 예산 삭감(제4안)
 - 2010년 영국 보수당은 정부 예산 20% 삭감이라는 초강수에도 불구하고 5년 간 모두 3,200억 달러(약 350조원 상당)를 교통 인프라의 확충에 투자하기로 했음을 예로 들.

■ 시사점

- 2011년 기준 GDP 대비 국내 SOC 투자의 비중은 약 1.8%로 미국(육상 교통 부문)보다 훨씬 낮을 뿐더러 SOC 재고량 자체도 OECD 평균에 미달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함.
 - 사용료를 현실화시키고 기존 유료 도로를 무료화시키는 정책도 재고되어야 함.

이복남(연구위원 · bnlee@cerik.re.kr)

주택 거래 정상화를 위한 두 가지 접근

- 과도한 심리 위축 해소에 주력하되 거래량 감소에 대한 구조적 변화에도 대응해야 -

■ 2012년 주택 거래 73.5만 호, 전년비 25.1% 감소, 2006년 이후 최저

- 지난해 취득세 감면 조치가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주택 거래량은 73.5만 호에 그침. 이는 금융 위기 직후 수준에도 못 미칠 뿐만 아니라 2006년 공식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임.
- 지난해 주택 거래량은 직전 5년 평균 대비 16.7% 감소, 주택 거래가 가장 많았던 2006년 대비 32.1% 감소함. 그러나,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경우에는 오히려 2006년 대비 20% 정도 증가해 주택 거래의 부진은 주로 수도권 주택시장의 문제임.
- 수도권에서는 직전 5개년 평균 대비 31.5% 감소하였는데, 특히 서울(-35.7%) 지역에서 크게 감소함. 강남 3구(-28.5%)의 거래량 감소폭이 서울 평균보다 낮아 상대적으로 비강남권에서의 감소폭이 크다고 볼 수 있음.

<주요 지역별 주택 매매 거래량>

(단위 : 건, 신고일 기준)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직전 5년 평균 대비	2006년 대비
전국	1,082,453	867,933	893,790	870,353	799,864	981,238	735,058	-16.7	-32.1
수도권	697,676	482,533	449,867	395,278	282,503	372,814	271,804	-31.5	-61.0
서울	263,599	159,396	147,023	138,016	88,737	114,315	83,257	-35.7	-68.4
지방	384,777	385,400	443,923	475,075	517,361	608,424	463,459	-4.6	20.4

자료 : 국토해양통계누리

- 거래 빈도가 높은 아파트만을 대상으로 주택 회전율*을 추정한 결과, 전국의 아파트 회전율은 2006년(9.8%)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져 2012년에는 5.6%에 그침.
- 지방 도시의 회전율은 7% 수준이 유지되고 있으나, 수도권은 2006년 12.4%에서 2012년에는 4.0%로 1/3 이상 급감. 서울은 지난해 전체 채고 아파트의 2.9%만이 매매로 거래되는 낮은 회전율을 보임.

■ 가격 상승률 둔화되면 거래량 감소도 불가피, 구조 변화에 따른 거래 감소에도 대응해야

- 우리나라의 주거 이동률**은 35.2%(2010년, 주거 실태 조사)로 OECD 평균 주거 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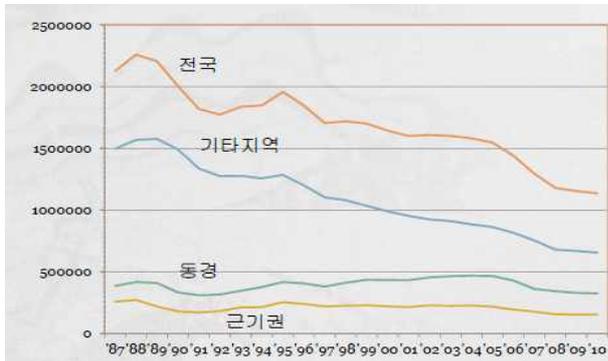
* 아파트 매매 거래량을 전체 스톡(재고 아파트 수+입주 아파트-멸실 물량) 대비 비율로 추정함.

** 주거 이동률=2년래 주거 이동 가구 수/총 가구 수(OECD 기준)

률(16%)보다 2배 이상의 높은 수준임. 따라서, 주택시장이 성숙기에 진입하면서 주거 이동률의 감소가 예상되며 주택 거래량도 동반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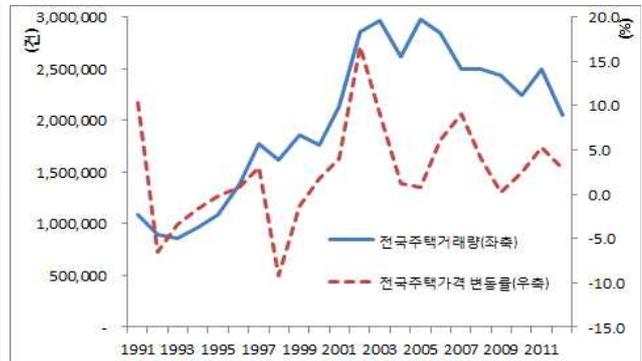
- 부동산 가격 하락을 경험한 일본의 경우에도 가격 하락 이후 거래량이 꾸준히 감소하는 추이를 나타내고 있음.
- 우리나라의 주택 가격 변동 및 토지 거래량 추이를 보더라도 가격 상승률이 둔화되면 거래량 감소는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현상임. 따라서, 최근의 거래량 감소는 부동산 가격 안정기, 성숙기 진입에 따른 구조적 현상으로도 해석할 수 있으며, 거래세에 지나치게 의존적인 현행 지방 세입 구조의 근본적인 개편이 요구됨.

<일본의 주요 지역별 토지 거래량 추이(1987~2010)>



주 : 토지 거래량은 매매에 따른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건수
 자료 : 法務省, 「法務統計月報」

<우리나라 전국 주택 거래량과 가격 변동률 추이(1991~2012)>



자료 : 국토해양통계누리 ; 국민은행

- 단기적으로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최근 연장된 6개월 간의 취득세 감면 기간은 다소 부족할 것으로 판단됨.
 - 통상적으로 주택은 고액의 자산으로 거래 기간이 다른 자산에 비해 긴 편임(의사 결정에서 잔금 납부까지 최소 1~2개월 소요). 따라서, 취득세 감면 기간 6개월 연장은 시장에서 거래 활성화로 이어지기에는 다소 부족한 기간임.
- 중장기적으로는 거래량 감소에 따른 관련 산업의 위축에 대비, 주택의 유지 관리 및 개·보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요구됨.
 - 개인 단위의 주택 개·보수(규모의 확대뿐만 아니라 시설 교체를 통한 성능 개선에 대한 개량 자금 지원, 관련 건축 규제 완화)를 활성화시킴으로써 과거 거래시에만 수반되었던 관련 서비스(주택 개·보수, 주택 관련 내구 소비재의 구매 및 교체 등)의 수요가 매매 거래 없이도 유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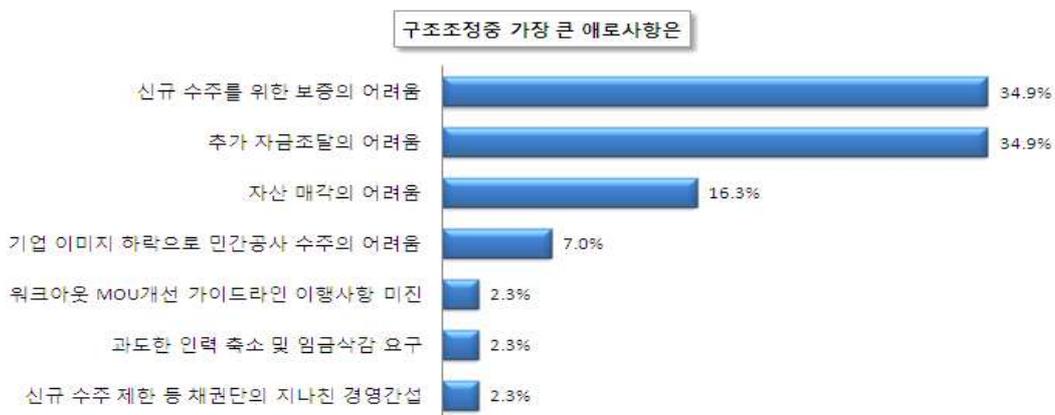
김현아(연구위원 · hakim@cerik.re.kr)

워크아웃 · 법정관리 업체, 공공공사 수주 활로 터줘야

- 워크아웃 및 법정관리 업체 애로 사항 조사 결과 분석* -

■ 워크아웃 · 법정관리 업체, 공공공사 수주를 위한 보증 길 막혀

-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가 채권단의 채권 회수를 넘어서 기업의 정상화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신규 수주를 위한 보증 문제 해소와 금융권의 추가 자금 조달이 가능해야 할 것으로 파악됨.
 - 구조조정 중 가장 큰 애로 사항으로는 ‘신규 수주를 위한 보증의 어려움’(34.9%)과 ‘추가 자금 조달의 어려움’(34.9%)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자산 매각의 어려움’(16.3%), ‘기업 이미지 하락에 따른 민간 공사 수주의 어려움’(7.0%)의 순으로 나타남.
 - 기업 이미지 하락에 따른 민간 부문 공사 수주의 어려움은 기업이 자체적으로 극복해야 할 문제이지만, 보증, 추가 자금 조달 및 자산 매각 등은 정부나 관련 기관의 협조가 요망되는 사항임.



- 상기의 애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취한 조치에 대해 질문한 결과, ‘채권단과의 협의를 통해 이견을 조정하였다’는 응답의 비중이 51.2%로 가장 높았음. 이는 결국 채권단이 어떤 행보를 취하느냐가 기업 정상화에 가장 밀접한 영향을 미침을 시사함.
 - 이 외에도 기업 내부적으로 ‘직원 간 응집력 강화 및 사기 진작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다’는 응답도 30.2%를 차지함. 그러나, ‘모기업과 공동 사업을 통한 보증 해소’라고

* 본 조사는 2012년 10월 22일부터 11월 20일까지 약 한 달 동안 워크아웃 및 법정관리 중인 업체와 졸업 업체 등 총 23개사를 대상으로 ‘경영 악화의 원인과 자구 노력 및 지원 요망 사항’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제397호부터 3회에 걸쳐 게재하고 있음. 본 고가 마지막 회임.

응답한 기업은 2.3%에 불과하여 대기업이 13개 업체나 되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모기업이 기업 정상화를 위한 경영 지원보다는 ‘거리 두기’를 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됨. 따라서, 경영 정상화를 위한 모기업의 보다 적극적인 협력이 요망됨.

■ 공공공사 수주 활로 없으면 정상화 요원, 축소 지향적 자구책은 업체 경쟁력 기반 훼손

- 현재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 업체들의 경우 대부분 2~3년 간 비정상적인 상태가 이어져 오고 있음. 현 상태라면 법정관리나 워크아웃 상태가 길어질수록 수주 활로가 막혀 기업이 정상화될 가능성은 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음.
 - 현재의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 하에서는 보증 제한 등으로 공공공사의 신규 수주가 불가능함으로써 기업이 회생할 수 있는 길은 M&A(Merges & Acquisitions, 인수·합병)밖에 없음. 그러나, 부동산 시장의 회복이 불투명한 현재 건설업체에 대한 M&A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현재 대부분의 자구책들은 IMF 시기에 시행된 것과 같은 생존 위주의 축소 지향적인 수단들로 단기적으로는 빠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업체의 경쟁력을 소실시켜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에서 벗어났을 때 지속 가능한 경영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 훼손될 우려가 높음.

■ 채권단과의 원활한 협의를 위한 정부의 컨트롤 타워 역할 기대

- 워크아웃 및 법정관리 업체들의 회생을 위해 채권단은 적어도 해당 기업들이 정상적인 경쟁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정부는 이를 관리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적인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보증을 지원하기 위한 신규 자금의 지원이 요망됨. 단, 보증 지원을 위한 신규 자금의 경우 조기 변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보증 지원 자금의 확보 방안 강구 요망
 - 보증회사의 경우 회생 가능한 채권에 대해서는 채권 회수를 연기하고 담보가 취약한 경우 요구하는 현금 예치 비율을 낮추어주는 방안 등에 대한 검토 요망
 - 채권 회수에 맞추어져 있는 워크아웃 약정을 기업 경영 정상화에 맞춤으로써 기업의 건전한 자산 매각이나 과도한 담보 제공 요구 등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김민형(연구위원 · mhkim@cerik.re.kr)

■ 주요 정부 및 기타 공공, 유관기관 회의 참여 활동

일자	기관명	주요 내용
2. 14	국토해양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기준과 주최, 중앙건설심의위원회 회의에 건설정책연구실 김민형 실장 참여 - 부산항 등 대형 공사 입찰 방법 심의
2. 14	건설기술교통평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탄소 저감형 건설 기술 개발 연구단’ 운영위원회 회의에 건설정책연구실 최민수 연구위원 참여 - 운영위원회 회의 및 연구 발표 자문 회의
2. 15	건설근로자공제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 근로자 단체 보험 사업자 심사’ 회의에 건설산업연구실 심규범 실장 참여 - 2013년도 단체 보험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의

■ 「민간투자사업 추진 일반 과정」 개설

- 기간 및 장소 : 2013. 2. 26(화)~28(목), 건설회관 9층 연수실
- 문의 및 참조 : 연구원 교육 담당(02-3441-0691, 0848), 연구원 홈페이지(www.cerik.re.kr)

■ 최근 발간물 현황

유형	제목	주요 내용
이슈포커스	최저가낙찰제도의 개선방향 조사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는 당초 2012년부터 최저가낙찰제 적용 대상을 3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 모든 공사로 확대하고자 하였으나, 중소 건설사들의 심각한 경영난을 감안하여 최저가낙찰제 적용 확대를 2년 간 유예한 바 있음. - 그러나, 최근 건설 경기의 침체와 더불어 건설업계는 최저가낙찰제의 확대 적용 반대 및 전면 폐지, 최고 가치(Best Value) 낙찰제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음. • 현행 최저가낙찰제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입찰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하여 각 이해 당사자(건설업체, 발주기관, 설계·엔지니어링·감리·용역업체)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음. 그 결과, 최저가낙찰제는 당초 시장 지향적 경쟁 원리에 적합한 낙찰자의 선정과 기업 경쟁력의 강화라는 도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가격 경쟁만을 유도하고 있어 향후 최저가낙찰제 확대에 대하여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현재 운영되고 있는 최저가낙찰제에 대해 76.1%의 응답자가 불합리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건설업체와 용역업체(감리/설계/엔지니어링)는 물론 발주기관에서도 77.4%의 응답자가 현행 최저가낙찰제에 대하여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음. - 2014년부터 최저가낙찰제를 현행 3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하려는 정부 계획에 대해 건설업체, 발주기관, 용역업체(감리/설계/엔지니어링) 모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더욱이 발주기관에서도 응답자의 87.1%가 최저가낙찰제 확대에 대하여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음.

새 정부, 선도적인 산업 정책 필요해

얼마 전 한국은행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또다시 낮추어 발표하였고, 기획재정부의 인수위 업무 보고에서도 3%의 경제 성장률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고용 등 거시경제 지표들의 수치도 지난해 12월부터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이처럼 어려운 우리나라의 현 경제 상황은 대내외적인 환경의 악화에 따른 측면이 크지만, 산업을 리드하는 정책 부재도 큰 원인이다. 국가의 중추적인 산업들이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발전적인 변화를 모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어 정부의 산업 정책이 선도적인 역할 수행을 하지 못한 것이다. 대표적인 산업이 건설산업이다. 최근 경기 침체의 한 원인인 건설 및 주택 경기 침체는 건설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산업을 리드하는 정책 부재가 한 원인이다. 건설 및 주택산업이 최근 변화하는 국가와 국민의 수요에 맞추어 산업의 역할과 기능의 변화를 모색하도록 유도하는 선도적인 건설, 주택 정책 및 제도가 그동안 마련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가의 중요한 역할은 고용 창출 및 산업 경쟁력 제고 등 국가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제공하는 산업의 발전을 리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이 산업 발전의 비전을 공유하는 것에서 출발, 정부에서는 기업들이 건전한 경제 활동하에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고 이를 통한 품질과 기술력 향상에의 재투자자와 고용 창출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산업 정책을 선진화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산업의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개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나친 규제는 산업의 성장을 제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기업들이 경제 주체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유도하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기업이 경제 활동을 하는 데 있어 경제적·윤리적·법률적 책임을 다하도록 지원하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건설산업이 최근의 침체를 벗어나 국가 경제의 재도약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산업으로 재탄생하기 위해선 산업 정책을 리드하는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규제 백화점’이라는 오명을 갖고 있는 건설 및 주택 관련 규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수적이다. 이와 함께 건설산업이 그동안 성장하는 과정에서 실추된 산업 이미지를 혁신하고, 건설기업들의 자발적인 윤리, 투명 경영을 유도하고, 이를 지원하는 정부 정책·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새 정부가 희망을 안고 출발하는 2013년, 산업의 발전을 앞장서서 리드하는 선도적인 산업 정책 마련은 새 정부의 가장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산업 정책에의 선도적인 역할은 최근 안고 있는 사회복지 확충 및 고용 확대 등의 현안에 가장 빠른 해법임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아시아투데이, 2013. 1. 16>

김영덕(연구위원-정책 · ydkim@cerik.re.kr)